



[국경없는의사회 웨비나]

인류를 위한 공공재, 코로나19 백신 COVID-19 and People's Vaccine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좌장: 문수리(Suerie Moon) /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국제보건센터장

최근 전 세계의 관심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쏠려 있다. 백신이 개발된다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있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각 국가와 기업의 백신 개발 경쟁이 시작됐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백신 공급량은 충분할 것인가, 어느 국가에서 누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가,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 등의 문제도 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접근성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대표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게회사: 티에리 코펜스(Thierry Coppens) /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국경없는의사회는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여 그 상금을 소외 질병을 위한 치료를 개선하고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해왔다. 이후 국경없는의사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보는 의료도구의 부재, 부적합성, 높은 가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후 중요한 진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저중소득국의 환자들은 저렴하고 질 높은 진단도구, 치료제, 백신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경없는의사회는 활동 지역에서 환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저렴한 의료도구가 부족하다는 데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의료도구의 접근성 문제가 고소득국가를 포함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본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정치화된다면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성이 간과되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금은 어느때보다 접근과 연대의 문제가 명백한 시점이다. 연대의 실패는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갈 것이며, 일상의 회복은 더욱 더디고, 미래 세대는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취약 계층은 사회적·정치적 긴장으로 인한 불균형으로 고통받을 것이며, 세계 경제 침체도 더욱 길어질 것이다.

팬데믹은 모두에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각국 정부와 연구자들과 우리 모두에게는 더욱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기조연설: 마누엘 마틴(Manuel Martin) /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의료혁신 및 접근성 정책 자문

국경없는의사회는 1999년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필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이하 '액세스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세 가지 주요 문제에 집중했는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필수약품의 1) 공급 부족, 2) 높은 가격, 3) 저중소득국 사용의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였다. 소외열대질환, HIV/에이즈, 다제내성 결핵 등 많은 경우 치료제가 없거나, 가격이 너무 높거나, 저중소득국에서 사용하기가 부적합하여 시장의 실패가 반복되었다.

순전히 이익을 추구하는 연구개발은 가장 시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대응하는 데 실패해왔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도 이렇듯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 가운데 일반적인 연구개발 모델은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현재 전례 없는 수준의 공공 자금과 민간 후원이 연구개발에 투입되고 있으며, 단기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COVAX, 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 (C-TAP) 등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구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근본적인 중점은 백신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접근성, 가격, 개방성, 투명성이 되어야 한다. 목적이 중심이 된 연구개발은 공중 보건을 가장 우선시하며, 접근성에 대한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가지 주요 문제에서 아래와 같은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1. 안정성/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의 투명성 유지 - 통합적인 실험 네트워크 (예: 감염병혁신연합(CEPI)) - 코로나 19 백신 임상의 연대
2. 제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제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노하우, 데이터 등의 개방 및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선스 기간의 투명성을 통한 제조의 지리적 다양성에 대규모 투자
3. “백신 민족주의”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로 백신을 공급하여 공정한 분배와 배급 보장(국가-기업 양자 간 공급계약 중 일정 비율을 백신의 공정한 글로벌 분배에 할당)
4. 저소득국가에서의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국가에서의 적합성을 고려한 임상 2단계 우선순위 부여 -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연구 지속
5. 가격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경비 또는 사전 합의된 감사가 가능한 마진만 책정 - 제조량 확대 및 '개발도상국 백신 제조사 네트워크(DCVMN)'에 기술 이전

패널토론

권순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가로막히는 것은 개방경제(open economy)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는 지속 불가능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주도하는 업계 뿐 아니라 농축산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도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은 이러한 면에서 한국 경제 어려움을 주고 여타 다른 개방경제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아닌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백신에 전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저중소득국은 위한 백신은 소외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인 논의의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국제적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공적개발원조(ODA)는 대부분 양자 협력 프로젝트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 차원의 연구 개발과 공중보건 필요 해결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제와 백신의 전 세계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투명성 강화, 기술 공유에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롬 김(Jerome Kim) /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백신 개발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 많은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임상 중에 있으며,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하지만 백신 개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공급량, 백신의 질,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백신의 보급과 지속성 등은 백신이 만들어진 이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백신이 개발된 후에 바로 맞닥뜨리게 될 시급한 사안들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백신이 개발 중인 현시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CEPI의 경우 연구개발에 공공자금을 투입할 때 글로벌 접근성 조항을 계약 상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백신의 개발 과정에서 여러 나라에서 임상시험을 할 때에도 임상시험을 허가하는 나라 차원에서 접근성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백신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국의 백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임상범 /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코백스(COVAX)와 같이 '모두를 위한 백신'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뿐 아니라 최근 질병관리청이 코백스 구매 공약서(Agreement)에 서명함에 따라 코백스 참여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또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을 통해 다른 여러 국가와 함께 전염병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사회에 미래 팬데믹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COVAX 우호그룹(Friends of Facility)로 참여하는 한편, 10월에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의에서는 WHO의 집행 이사국으로서 COVAX 및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의 경험과 교훈을 국제 사회와 공유할 것이며, 코로나19 백신의 혜택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 시점 국가 간, 기관 간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 중요성을 옹호할 것이며, 시민사회, 학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윤진원 / 제넥신 연구기획

현재의 제넥신이 있기까지는 국민의 세금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축적된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DNA 백신은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타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온 안정성으로 글로벌 보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DNA 백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였다. 하지만 백신의 대규모 생산을 위해서는 (> 천만 도즈

/년) 백신 구매 보장이 필요하다. 제넥신은 백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보유한 제조 시설은 없기에 국내 생산 대행기업(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2 곳과 해외 기업 2 곳을 대량 생산을 위한 후보 생산소로 고려하고 있다. 임상 2단계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 시점에 이러한 제조소를 통해 생산할 계획이고, 글로벌 3 상을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 백신개발을 원하는 국가에 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매 약속이 수반되어야 한다. 구매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조사는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정부는 민간 기업의 백신 개발 과정을 지원하며, 각 기관은 백신을 공평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등 팬데믹의 전 세계적 종식을 위해서는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 결론

상호 의존(Interdependence)

백신 접근성은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여러 국가 및 관계 당사자들 간에 상호 의존되어 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을 극복하는 것은 각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백신의 개발단계에서도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개발과 임상시험 등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치적 컨센서스(Political Consensus)

팬데믹 극복이라는 중요한 임무에 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글로벌 컨센서스를 구축해가야 한다.

공공·민간 협력 이니셔티브(Public & Private Mixed Initiatives)

코로나19 종식은 어느 한 섹터나 어느 한 국가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공공과 민간 부문간의 공동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며, 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